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13('22-3) | 2022. 03. 02.

신 냉전기 논쟁보다 중요한 것
권영태

북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과 우리의 대응
김열수

김정은 정권의 군부통제 및 국방력 강화
장광열

신냉전기 논쟁보다 중요한 것

권영태

(좌표 22 대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이론적 논쟁보다 가치 대결에 주목해야

오늘날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에서 미·중 대결은 여전히 상수에 해당한다. 과거 냉전 시절에도 미·소 대결이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최근 학계의 논의에서 중요한 초점의 하나는 과연 미중 대결이 냉전시절과 본질이 같으나 다르냐이다. 이른바 신냉전기 논쟁이다. 신냉전기의 도래를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실용, 다층적 구조, 상호 의존 같은 키워드를 통해 과거 미소 대결 시대와는 다르다고 본다. 신냉전기로 모든 그렇지 않든 양 견해는 모두 일리 있는 분석이다. 각자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한 논거와 이론적 틀도 훌륭하다.

그렇지만 신냉전기 여부를 엄밀하게 학술적으로 가리는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 국제정치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은 사실 갑작스런(?) 탈냉전의 도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어쩌면 이는 학문의 근원적인 한계인지도 모른다.

신냉전기 논쟁보다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미국과 중국의 가치 대결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치 대결이란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둘러싼 근본적인 방향성의 차이에서 오는 경쟁을 의미한다. 가치 대결은 냉전 시대에는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나타났고, 탈냉전 이후에는 문명의 충돌 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탈냉전 시대 가치 대결

탈냉전 시대로 들어선 이후 전 세계적인 판도에서 이데올로기의 대결이 종식되었다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모든 이데올로기가 종식되지는 않았다. 종식된 이데올로기는 과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국가사회주의 이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국가사회주의 이념도 종식되지 않았다. 여전히 사회주의 일당 독재의 중국이 미국과 대결을 지속한다. 중국의 종속 변수인 북한은 중국의 당독재보다 더 극심한 수령독재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미·중 대결이나 세계 각지에서 표출되는 문명의 충돌은 과거의 냉전과 그 양상은 상당히 다르다. 세부적인 내용도 달라졌다. 그러나 가치 대결의 관점에서 볼 때 한 축은 그 때나 지금이나 같다. 미국은 냉전시대에든 지금도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를 견지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은 근대 민주주의 혁명 이후 세계사적 발전의 방향이다. 국가사회주의이념과 문명적 정체성의 충돌 이전의 세계사에서도 다양한 가치 대결의 역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대결은 다양했으나 늘 한 축은 같았다.

한 축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확대하려고 했다. 다른 한 축은 이에 대한 반대의 물줄기였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산이라는 세계사적 발전 방향은 지난 수백 년 간 역사의 기본 축이었다. 시기와 장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용되어 나타났을 뿐 가치의 대결은 계속 됐다.

세계사 속의 가치 대결

20세기 전반기는 민주진영과 전체주의 진영 간의 대결이었다. 독일에서는 나치즘으로,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즘으로, 일본에서는 군국주의자들의 발호로 나타났다. 일본은 아시아의 패권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다.

전체주의 진영이 세계사에 미친 해악은 엄청났다. 유럽에서는 아우슈비츠가, 아시아에서는 731부대가 특히나 악명을 떨쳤다. 당시 신생국이었던 사회주의국가들조차 민주진영에 합세했다. 우선 전체주의 진영을 패퇴시키기 위해 연합했다. 미국은 당시 전체주의 진영과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시급했기에 소련공산체제와 연대한 것이다.

민주주의 진영은 전체주의 진영을 격퇴했다. 이후 민주주의 진영은 사회주의 진영과 직접 대치하게 됐다. 사회주의국가들은 민주적 세계질서 형성에 동참하지 않고 철의 장막을 구축했다. 아시아에서는 죽의 장막이 구축됐다. 전체주의 진영을 막 격퇴한 민주주의 진영의 대표 국가 미국은 사회주의국가에 맞선 세계전략을 전개했다. 공산국가들과의 대결은 냉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리고 다시 승리했다.

미·중 갈등의 본질은 가치 대결

탈냉전 이후 가치 대결은 문명의 충돌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에 반대 또는 저항하는 흐름이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첨예하게 촉발된 곳은 바로 중동이다. 자스민혁명이 여러 나라를 휩쓸었다. 수십 년 이상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한 이란, 이라크도 결국 민주화의 물결을 받아들였다. 유럽에선 러시아가 비록 체제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과거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그 본질은 같다. 국가의 규모나 경제력의 수준, 패권적 경향 등으로 판단하건대, 오늘날 민주주의와 인권의 세계사적 확산을 가로막는 주된 축은 사실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이념을 견지하고 있다. 과거와 같은 열전이나 냉전 같은 첨예한 형태는 아니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가치 대결은 언젠가는 터져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 중국은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많은 이들의 눈을 흐리고 있다. 중국은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을 통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했다. 이후 한 세대를 경과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했다. 경제가 성장하다 보니 호사가들은 중국을 G2 반열에 올리기까지 했다. 중국의 국력 부상으로 동아시아에서 과거 소련의 역할 또한 중국이 떠맡게 됐다. 북한은 처음에는 소련을 종주국으로 삼았지만 중국의 부상 이후 중국에 기대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중국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대립과 분쟁의 본질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 vs. 반대 또는 저항하는 흐름의 대결이다.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대결 또한 마찬가지이다. 신냉전기 여부를 가리는 이론적 논쟁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서 가치 대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과 우리의 대응

김 열 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

북한은 2022년 1월에만 7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컴스(KN-24), 1,800km를 비행한 장거리 순항미사일(KN-27), 마하 10 및 비행거리 1,000km의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 사거리 5,000km의 중거리탄도미사일(화성-12형) 등 이었다. 이미 실전 배치한 KN-23이나 KN-24의 경우는 시험 발사가 아니라 준비태세 및 무기체계의 성능을 검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화성 8형은 무기체계 시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화성 12형은 1월 19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이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재검토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북한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도발이었다.

2월에 접어들자 북한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축하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도발을 멈추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났으니 북한은 다시 도발을 이어갈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시기를 한국의 대통령 선거 전후, 2022-1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전후하여 도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안보 정세나 북한의 명절 등 안보환경에 따라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이런 판단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가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북한도 무기체계를 실전배치하려면 실험이나 시험발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 신무기의 실험이나 시험 발사도 개발의 진전 정도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 다만, 안보환경 등을 명분이나 구실로 삼아 실험이나 시험 발사시기를 조절할 뿐이다. 안보환경이 독립변수가 아니라 무기개발 계획이 독립변수라는 점이다.

한미연합훈련을 안 한다고 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판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북한은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이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도 북한의 훈련 및 시험발사를 국방력 강화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를 통해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군사력 건설의 중기계획과 같은 개념이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및 지상 발사 고체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 무기(SLBM), 군사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북한은 지난 1월에 5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인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해서만 시험 발사를 했다. 앞으로도 일종의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다양한 무기 실험 및 시험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미 실체는 공개했으나, 시험하지 않은 무기도 있고 아직 베일에 싸여 있는 무기도 있다. 신형 ICBM인 화성-17형과 SLBM인 북극성-4형과 5형 등은 각종 열병식때 이미 공개되었다. 따라서 이 무기들도 조만간 시험발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아직 공개된 적이 없는 핵잠수함과 무인정찰기 등도 머지않아 공개될 것이다. 또한, 동창리 발사장을 이용하여 군사정찰위성이 발사될 수도 있다. 5대 핵심 과제가 실체를 드러내는 중간 중간에 초대형방사포(KN-25) 훈련을 하거나 3,000톤급 잠수함에 대한 진수식을 거행할 수도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하여 발사체를 발사하는 것은 안보리결의안 제1718호에 위배된다. 그러나 지난 1월 북한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했음에도 유엔 안보리에서는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심지어 화성 12형을 발사했을 때에도 유엔 안보리는 결의는커녕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조차도 채택하지 못했다. 미·중간의 갈등과 미·러 간의 갈등이 첨예한 안보 환경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 정세와 유엔 안보리의 허점을 파고들어 도발을 일상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는 신형 무기가 개발만 된다면 언제라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신형 무기를 공개하거나 시험 발사할 때마다 부산을 떨기보다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KN-23과 KN-24는 레이더로 탐지하기 곤란한 고도와 회피기동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8형은 이에 더하여 마하 10의 비행속도까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의 무기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를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북한보다 우수한 신형 무기 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전략전술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도 있다. 한국이 중장기 군사력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또 다양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억지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자신이 불리할 경우에만 대화에 나섰던 것이 북한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군부통제 및 국방력 강화

장 광 열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책임연구원)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김정은 정권의 통치 안정화 및 경제난 악화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로부터 정권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그의 짧은 정치수업과 불안정한 지지기반으로 인하여 당시 장기집권에 대한 회의적인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후 김정일 장례식의 운구를 맡았던 기존 정치 권력자들을 정치 일선에서 퇴진시키는 한편,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이자 견제세력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하면서부터 점차 북한의 일인자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살해되면서 그의 독자적인 위상을 더욱 강화시켰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초기의 정치적 불안함을 극복하고 현재, 1인 독재의 기틀을 확고히 하여 그의 의지를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펼칠 수 있는 안정적인 정치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은식 권력의 연착륙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① 공포를 통한 독재적 권위의 획득이라 말할 수 있는데, 김정은의 고모부임에도 불구하고 충성심을 문제 삼은 장성택 그리고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기남 등을 과시용 총살을 한 사례가 그것이다. ② 군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으로서, 김정일 정권에서 추구하던 선군정치를 탈피하고 당을 우선 시 하면서 군부를 위한 재래식 전력 증강을 제어함과 동시에 잦은 군부 수뇌의 교체와 계급 강등을 통해 군부의 권력 획득을 통제하는 것이다. ③ 핵무기의 정치적 상징화로서, 핵무기 완성이 어떤 외부적 위협도 억제할 수 있으며 이런 핵무기는 자신의 영도에 의해 온 인민이 일치단결하여 만든 결과라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 일로를 거듭하여 왔다. 선대인 김정일 정권 시기인 2006년, 탄두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하여 시작된 UN의 대북제재는 현재까지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일종의 상수가 되어버렸으며 특히, 북한이 야심차게 추진해온 북미 정상회담은 2019년 하노이 제2차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되게 만들었다. 특히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세계적 재앙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상황은 더욱 어렵게 되었다.

현 북한의 국방력 강화 방향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볼 때, 북한은 재래식 무기의 성능 개발과 수적 향상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된다. 그것은 재래식 무기를 통해 안보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제적 재화가 소모되어야 하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을 우선시 하고 군을 당에 의해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재래식 전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현 군부의 능력과 위상의 확장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같은 일인 독재체제인 국가에 있어 군부가 쿠데타 위협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김정은 정권이 의도하고자 하는 안보 능력, 즉 국방력 강화는 다음 세 가지의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첫 번째 핵무기의 위력과 핵을 운반하는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자 할 것이다. 핵무기 운용체계를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저개발 국가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 일 것이다. 그러나 재래식 무기를 발전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경제적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현 군부는 재래식 무기를 운용하게 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을 포함하는 전략무기들은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별도의 지휘라인을 구성하고 여기에 과학 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체계를 구성하여 통제하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야전군을 중심으로 하는 현 군부는 권력의 정점에서 멀어지고 당에 의한 원활한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는 과거 4대 군사노선 중 하나인 ‘전 인민의 무장화’의 현대판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지난 1월 12일 자 Daily NK에 의하면 북한은 도, 시, 군 민방위부와 민방위군 간부의 지휘관들의 임용 요건을 강화하면서 “민방위군을 정규군이 아닌 반 군사조직으로 생각하던 과거의 낡은 사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지난해 9.9절 행사에는 유래 없는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기존의 정규군은 배제하고 준군사부대 위주의 퍼레이드를 실시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역방위 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준군사부대의 능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암시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무형전투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군인을 포함하는 전 인민의 사상무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실행하여 온 습관적인 행위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상무장은 지속될 것이며 더욱 강화하리라는 것이다. 기존의 백두혈통에 대한 최고 존엄의 가치를 유지시킴은 물론, 핵무기의 위력에 기반한 인민들의 의존적 사상을 고취하고 외래문화를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사상무장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최근 북한 사회는 청년과 학생들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이들이 북한 사회규범이 테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단속에 더욱 진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을 매개로 한 극도의 국내 교류 차단과 국경봉쇄는 미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 주민 사상무장의 완성’을 위한 밑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다.

평가 및 제언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권력을 이어받은 지 10년 정도가 지난 현재, 정권 초기에 비해 그를 중심으로 하는 독재 권력을 안정시키는데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대로부터 이어져 온 취약한 경제 능력은 북한 발전에 대한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더군다나 최근 각종 자연재해와 코로나를 비롯한 질병은 북한의 국가적 능력을 마비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결합하면서 미래 북한의 국방력 발전이 ‘핵을 비롯한 전략무기의 위력 증대’, ‘지역방위 및 준군사부대의 역량 강화’, ‘전 인민에 대한 사상무장의 완성’ 등의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에 힘을 실어준다.

위와 같은 북한의 미래 국방력 강화 방향에 대비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준비하여야 하는데, 제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의 핵을 비롯한 전략무기체계의 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체계의 개발이다. 북한이 현재 핵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는 시설들은 한미정보공조체계에 의해 대부분 알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생산된 핵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각종 수단들도 적극 파악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략무기의 현황과 능력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하고 이에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정보자산의 운용을 통하여 관련 시설 및 부대, 장비에 대한 변화와 움직임 그리고 의도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만약 북한의 핵투발을 위한 징후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즉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계획과 무기체계 및 사전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각종 대북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사회의 폐쇄성과 억압적 정치로 인하여 이와 같은 정책은 쉽게 결실을 보기 어려울 것인 바,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현재 빈곤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식량문제와 코로나를 포함하는 보건 문제 등이 우선 순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대북 지원은 국제사회와 공조를 이루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을 위해 투명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미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열악한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핵을 비롯한 전략적 무기체계에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발전시키면서 이를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미래 경제 상황이 향상되고 국내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면, 다시금 재래식 무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은 “핵무기는 실제로 사용할 수 없고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만큼 현대 전장에 있어 재래식 무기의 활용이 아직도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장기적인 관심과 추적이 요망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